

인권조례 선제 대응, 미세먼지 대책을

▶ 전북도의회 5분 발언

허남주, 인권센터 미설립 따져
김종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해숙, 고 1년 전환학년제 제안
최인정, 교사가 행복할 수 있게
강용구, 장애인 체육인 처우개선
최영일, 복지자 재고처리 재촉구

전북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5분자유 발언서 의원들은 인권조례 선도적 대응, 미세먼지 대책, 전환학년제 학교설립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5분 발언은 허남주(비례), 김종철(전주7), 이해숙(전주5), 최인정(군산3), 강용구(남원2), 최영일(순창), 강영수(전주4), 한완수(임실) 의원이 나섰다.

▲허남주 의원 = 인권센터 통한 선제적인 인권행정 대응 필요

허 의원은 "지난 18일 도내 14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이 있었다. 외형적 구조는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인권제도로서의 가장 핵심인 인권센터는 아직 미설립됐다"고 했다.



허남주 의원

허 의원은 "인권도시 이행은 인권조례 구성, 인권제도 마련, 인권정책 시행해야 한다. 전북도는 인권제도 마련까지 돼지만

인권센터 설치를 통한 조치 설치는 아직 미흡하다. 조치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전주 자립원 사건이나 남원 장애인 폭행에 대한 인권 침해 상담조사가 사전에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행정 주된 당사자인 공무원과 도민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분야별 인권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종철 의원 =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주 원인

김 의원은 "미세먼지의 41%는 경유차에서 나오는데 전북 등록차량 83만대 중 경유차가 45.7%인 38만대이고, 이 중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2005년식 이전 차량이 전체의 31%인 12만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에서는 2005년식 이전 경유차가 매년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매년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북은 배제돼 있다"면서 "서울보다 전북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형평에 맞는 환경정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철 의원

▲이해숙 의원 = 고등학교 1년과정 전환학

이 의원은 "잘다운 교육의 생명력은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자유학기제가 도

입됐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입시교육 가운데 스스로 살아남아 꿈을 찾고 나아가도록 돕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 학생을 모집해 1년 동안 자율적이고 집중적인 중점 과정을 선택해 깊이 있는 체험과 자아 발견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전환학년제'를 통해 공교육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숙 의원

이 의원은 "혁신교육은 입시 경쟁 위주의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창의적 진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며 "전북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과정 설정을 통해 그 가치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인정 의원 = 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 촉구

최 의원은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깊은 좌절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도내에서도 지난해 150건의 교권침해 사건 중 대부분이 학생들에 의해 발생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 인권만 강조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교사의 인권을 뒤흔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정 의원

▲강용구 의원 = 장애인 전문 체육인 처우 개선 시급

강 의원은 "장애인에 있어 스포츠 분야는 자신의 신체적 약점이나 그밖의 정신력 등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 장애인 체육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처우 개선이 요청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장애인 체육인수가 급매달 2~3개를 획득해도 1년 최대 1,4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이보다 못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오죽하겠느냐"면서 "팀 창단이 어렵다면 일반인 선수들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용구 의원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장애인 체육인수가 급매달 2~3개를 획득해도 1년 최대 1,4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이보다 못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오죽하겠느냐"면서 "팀 창단이 어렵다면 일반인 선수들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영일 의원 = 복지자 재고처리 재촉구

최 의원은 "지난 331회 임시회에서 복지자 재고처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지만 지역농협에서 착취 주스를 만들면 도청 공무원들을 통해 팔아 주겠다는 것이 고자이다. 전북도 차원에서 홍보 마케팅 예산 확보등을 통해 생과 판매 극대화 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북은 복지자 주산지로 이미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무늬만 주산지다.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영일 의원

최 의원은 "전북은 복지자 주산지로 이미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무늬만 주산지다.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가결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비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적었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이 이전에 비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희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아직도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며 "장애인은 이렇듯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같은 정적인 활동유구가 장애인에 비해 더 더디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미술품 의무구입 비율 등이 있다. /신광영 기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조례안' 정책토론회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의원,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 전북도청 이송희 사회복지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연구회 공동추진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보육서비스의 소비자인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과 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자리가 돼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최인정 대표의원은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설보다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활용이 더 바람직해 조례(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제공하는 어린이집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다"면서 "이에 국공립으로 전환 시 기존 어린이집과 합의해야 하고, 시설 등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회는 추후 1~2회의 토론회를 거쳐 '전라북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오는 7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김대중 도의원(익산1)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근거를 뒀다.

전주, 완주 일원의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말,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전을 마친 상태다.

전북혁신도시는 인구 3만명 유입효과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을 마친 뒤부터 생산유발 효과 5,400억원, 부가가치효과 4,200억원, 고용유발효과 6,500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도내 9곳이 혁신도시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최종 선정결과를 두고 탈락한 지자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가 가져가지 아니한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하게 됐다.

기금은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시·군에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 ▲전라북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수입금 등으로 조성기로 했다.

또한 ▲전라북도가 시·군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반시설 지원 사업 ▲각 시·군의 교육·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에 사용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전북도에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공포된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조금만 여유 있었다면" 안철수의 말 실수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 "조금만 여유가 있었다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 모른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한 사실이 지난달 31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안 대표는 전날(30일) 오후 9시50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당한 참담한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미 여러 사람이 똑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제는 첫 글을 올린 직후 올린 두 번째 글에서 불거졌다. 안 대표는 두 번째로 쓴 글에서 "가방 속에서 나온 커피라면 마음을 더 아파게 한다"며 "조금만 여유가 있었다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에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다. "여유가 있었으면 덜 위험한 일 택했을지도..."라고 적은 부분 때문이다. 이는 곧 돈이 있었으면 다른 일을 택했을 것이고,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온라인 상에는 "그 젊은이가 다른 일을 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희생했을 것", "온실 속 화초다운 발언",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여유가 있다면 안 했으리라는 발상은 일자리 차별"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안 대표는 자신이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두 번째 글을 지우고 새로 글을 올려, "앞으로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며 "완전히 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후 해당 논란에 대해 별도로 해명은 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후 2시30분께 다시 글을 올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책임 애도를 표한다.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해당 분야 청년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대표와 노회찬(오른쪽)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을 찾아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모(19)씨를 추모하며 헌화를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8일 구의역의 고장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죽었다.

'정치적 자유인' 문재인 전국 훑으며 민심 행보

정치적 휴식이 활용해 유권자들과 눈높이 맞추며 '사람 먼저' 활동할 듯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에서 '정치적 자유인'이 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해 전국 곳곳을 훑는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자신의 대선 슬로건과도 같은 '사람 중심' 행보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8일에는 부산지역을 찾아 400여명과 함께 금정산 등반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지난 대선 당시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7일에는 경북 안동을 찾아 경북지역 낙선자들과 식사를 했으며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을 방문했다. 지난 17일 오후에는 광주·전남지역 낙선자와 '민간 화동'을 했고 16일에는 전남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린 소록도 '천사 할매'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82·오스트리아)와 마가렛 피사렛 수녀(81·오스트리아), 김혜심 교무의 명예 군인증수여식에 비공식으로 참석했다.

여기에 6월1~2일에는 충북 보은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 정다면 가히 대선 후보의 광복 선거운동에 다름 아니다. 자유인 신분으로 전국을 훑는 것이다.

이같은 문 전 대표의 동선은 그간의 대선 주자와는 사뭇 다르다. 유권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자유롭게 득표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가 정당의 대표나 유력 주자로서 여의도에서의 고공 플레이보다 1년여 동안 물밑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면을 늘려서 한 표, 한 표 따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께서 그간 이야기한대로 이제 의원 신분도 아니고 자연인만민군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서 시민과 호흡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며 "민생현장을 찾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대선과는 다른 문재인인의 승부수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1일 충북을 방문기로 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알려졌다. 대민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문 전 대표는 1일 오전 충북 청주 청원역 전주교청주교구 방문 뒤 지지자들과의 만남 등을 거쳐 속리산 법주사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주 기자